
2022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12.



목 차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3
1.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3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5
3.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행정	7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9
III.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0
1.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10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12
3.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	14
4. 모두가 편안한 안전사회	16
I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8

【별첨】 4년 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개혁 완비

-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 완료 및 시행('21. 1.)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 상호 협력 규정 도입,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검사의 사법통제 신설 등

-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근절과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지원('21. 1.)

□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에 맞는 검찰조직 정비

-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19.~'21.)

※ ① '인권보호관' 확대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 신설
②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 ③ 서울중앙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등

- 리더십, 능력,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찰 인사를 시행하여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 도모('21. 6.~8.)

- 기존의 주요사건 중심 보고체계를 인권보호·사법통제·수사협력·제도개선·공익대변 등 국민·인권 중심 보고체계로 개선('21. 7.)

□ 불합리한 수사관행 등 조직문화 개선

-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불필요한 수용자 반복소환 금지,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 등 수사관행 개선방안 시행('21. 1.)

- 형사사건 공개 기준·범위 등을 구체화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합동감찰을 통한 수사관행 개선('21. 8.)

-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재설계 추진('21. 10.)

□ 평가

- 새로운 제도 평가·분석 및 미비점 보완 등 개혁방안 지속 추진 필요

② 인권의 가치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포용사회

□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

-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
 - * 입법예고('21.6.~8.), 법제처 심사 중('21.10.~), 연내 정부법안 국회 제출 예정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지원변호인 제도 시행 등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21. 7.)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하여 임시생활시설 제공, 장기체류자격(F-2)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21. 10.)
 - * 총 입국자 391명 중 미성년자 238명(60.8%), 6세 미만 아동 93명(23.8%)

□ 가석방 확대 등 사람을 살리는 교정행정 실현

- 모범 수형자·환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개선의지 촉진 및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21. 10.)
 - * [가석방 출소율] '17년 26.2% → '21년 34%로 대폭 증가
 - **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7년 119.8%(57,298명) → '21년 106.7%(52,265명)로 감소
-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수형자·기업체 맞춤형 취업매칭 제도 등 사회복귀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21. 12.)
 - ※ 소년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바리스타 직업훈련 과정 지원, 출소 후 커피 전문점 근무 등 취업 알선 연계('21. 12 서울구치소 내 희망커피 1호점 개업)

□ 개방적·포용적 외국인 정책 추진

-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21. 4.) 및 자녀양육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 요건 완화*('21. 7.)
 - *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기준을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완화
-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를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인재 포용을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개편('20. 6.)
 - ※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 개최('21. 4.),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 관련 현장의견 청취('21. 5.) 및 KAIST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개최('21. 10.)

□ 평가

-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 법무행정 지속 추진 필요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① 민생 안정에 기초한 공정사회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서민의 주거·영업권 보호 강화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 개선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20. 7.~'21. 5.),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21. 7.)
 - 지자체·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한정승인 신청 등 소송구조 지원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21. 12.)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21. 4.)
 - ※ '21. 10. 기준 사회봉사 15만 명('19년 대비 3배 증가), 계절근로 약 1,000명 투입

□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기반 구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법률지원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창업 청년들과의 현장 대화 및 정부-대학 간 창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21. 9.)
 - ※ 창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추진 중'('21. 11.)

□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 관련 검찰청별 전담수사팀 편성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투기 범죄 엄정 대처
 - ※ [검찰직접수사] 79명 인지(19명 구속), 283.3억 원 보전조치
 - [경찰수사협력] 4,066명 송치(62명 구속), 1466.9억 원 보전조치('21. 11. 기준)
-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포싱에 대응하여,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대검 TF 설치 등을 통한 근절 노력('21. 7.~11.)
 - ※ 보이스포싱 척결을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22. 상반기)

□ 평가

- 서민경제 활성화 및 공정질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② 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혁신

□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 개선

-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맞춘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1인 가구 비중] '15년 5,203,440가구(27.2%) → '20년 6,643,354가구(31.7%)

- 친족(친양자제도 개선)·상속(피상속인 의사 반영)·보호(스토킹처벌 등)·유대(반려동물 지위 개선)·주거(주거침입죄 형량강화) 등 5대 중점 과제 발굴('21. 2.)

※ '구하라법' 국회제출('21. 6.), 동물의 비물건화 관련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21. 10.)

□ 형사사법 전자화를 통한 절차 투명성과 국민편익 제고

-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10.)

(주요 내용)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 부여,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작성, 사건관계인은 선택적 전자문서 이용 등

- 전자화된 기록의 제조·유통, 원격화상조사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형사절차의 투명성·공공성 강화

※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하는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24. 하반기 개통)

□ 국민수요 맞춤형 법무정책 추진

- 출국 외국인 정보를 과기부와 매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국자 휴대폰의 신속한 차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사전 방지('21. 4.)

※ 시행일 이후 총 127,551건 해지 및 정지 조치('21. 10.기준)

- 법률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리걸테크*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등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반 마련('21. 11.)

* ICT를 활용하여 변호인선임, 상담신청, 법령검색, 법무회의 등을 도와주는 기술

□ 평가

-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법무행정으로,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 개선 실현

3.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행정

① 현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발굴 시스템 운용

□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 장관으로서 첫 임무를 서울동부구치소 방역점검으로 시작하는 등 총 100회(이동거리 약 31,111km)에 걸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21. 1.~12.)

(주요 정책 현장 방문)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응 실태 점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임시생활시설 점검 등

*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20. 11.) 당시 총 1,206명 확진, 이후 수용밀도 조절·방역강화·전수검사 실시 등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조속한 기관 정상화('21. 2.)

- 법무부 내 여러 직렬·직급을 아우르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법무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탈검찰화 구현

※ 교정·출입국 기관장회의, 청년 출입국 직원들과의 정책토론 등 총 10회 개최('21. 4.~12.)

□ 통일시대를 대비한 역할 강화

- 국제학술대회 개최, 장관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률전문가 양성 등 통일 대비 법제화 기반 마련('21. 10.)

- 장관의 미국 강연·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통일을 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 제시 및 통일 네트워크 구축('21. 11.)

※ 국외 출장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 맨스필드 재단 대표 대담, 코리아 소사이어티 간담회 등 진행

□ 통계에 기반한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 주요 법무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 통계지표 54종* 발굴('21. 5.)

*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 가석방 취소율, 출소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별 재복역 현황 등

- '통계업무 개선 TF' 운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성과관리계획 수립·성과 평정 반영 등 객관적 데이터 중심의 법무행정 기반 조성('21. 12.)

□ 평가

- 현장에서 답을 찾는 법무행정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

②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21. 2.)하여 검사·경찰·지자체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 간 협업 체계 기반 강화(‘21. 10.)
 - ※ 아동인권사건관리회의 개최(‘20년 6회 → ‘21년 42회, 36회 증가)
-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21. 7.)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문위원회 권고(4회)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형사사법 대응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21. 11.)
 - ※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4.)
-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21. 7.)하여 안전사고 처리 프로세스 전반 점검 및 실효적 예방시스템 구축(‘21. 11.)
 - ※ 중대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변사사건 지침 개정, 산업재해 사망사건 원칙적 구공판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시행

- 고위험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군 전담제’, ‘신속 수사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21. 10.)
- 재범 고위험자의 범죄내용·피해대상 등 특이사항을 현출하는 관제 시스템 개선,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관제방식 혁신(‘21. 10.)

□ 감염병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국경관리시스템 확립

-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차단, 사증발급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 효율적·선별적 감염병 유입 차단
- 입국 전 외국인의 개인정보나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위험을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세계 5번째로 시행(‘21. 9.)
 -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 대상, 모바일·PC로 개인 정보 입력 후 여행 허가 가능

□ 평가

-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시스템 마련 노력 지속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새로운 형사사법 시대에 걸맞은 검찰의 역할과 지속적인 혁신 기대**
 - 변화된 절차에서도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국가수사력에 공백이 없도록 바람직한 검찰의 역할과 지속적인 조직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 존재
 - ※ '21. 6. 28. 한국일보, 「수사권 조정하자 고소인이 '죄인' 됐다.. 접수는 막히고, 수사는 깜깜」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존의 정의 요청**
 - 부동산 투기, 소득 불균형, 사회·경제적 특권 계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에 대한 기대 증대
 - ※ 향후 정부 추진업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 47%, '경제·부동산 선정'[21. 11. 한길리서치
-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실현 요구**
 -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인권과 질서가 조화되는 존중과 상생의 사회 구현
 - ※ 국민 90.2%, 코로나 이후 혐오·차별 증가,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21. 9. 국가인권위원회
-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안전사회 갈망**
 -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살인 사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발생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 요구
 - ※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21. 9. 리얼미터]

2. 업무추진 방향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①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정립

-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인권 친화적 검찰상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 정비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신설된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인권보호부·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지속 발굴('22. 상반기)

□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제고

- 검·경 간 수사기관협의회,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등을 통해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 강화
- 부패·금융범죄 수사의 공백 방지를 위해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22년)

②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

□ 불합리한 수사관행 개선 노력 지속

- 대검 내 사건 접수, 담당 부서 지정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합리적 조정 절차 규정 마련 등 공정한 배당 기준 정립('22. 상반기)
- 수용자 반복조사 감독 절차 및 수용자 면담 기록화 방안, 증인사전 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22. 상반기)

□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모색

-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의 필요성, 통제 및 점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재설계('22. 상반기)
- 고검 기능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역할 재정립, 시민참여제도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방안 등 지속 연구

※ 대검 자체 개혁 기구인 「국민중심 검찰추진단」('21. 6. 출범하여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 업무 적극 지원

③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 인공지능(AI)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축적된 빅데이터(연간 법률상담 약 140만 건, 소송대리 약 15만 건)를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365일 24시간 AI 법률상담 제공
- 코로나19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접근성 제고 및 법률복지 안전망 강화
 - ※ 법률상담 질의·응답시스템, 맞춤형 자료제공 등 시스템 구축('22.~'24.)

□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정시스템 구축

- 수용자 도주·자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밴드·레이더를 활용한 활력징후 감지시스템, 무소음 이동형 CCTV 구축·고도화('21.12.)
- 다기능 민원 단말기를 전국 교정기관에 확대*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수용 점검 등 시공간 제약 없는 수용관리 환경 조성('22년)
 - * '21.5. 서울남부구치소 등 4개 교정기관에서 다기능 민원 단말기 시범운영

④ 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 미래 시민사회를 대비한 민사법 개정

- 사람의 인격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 시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규정을 마련('22.3분기)
- 재화와 용역 중심으로 규율되던 계약관계에 디지털제품(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 신설('22.4분기)

□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 법무부 내 '리걸테크 TF'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이 기존 업계와의 상생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검토('22년)
- 리걸테크 산업이 경제를 선도하는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여 법률서비스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생태적 기반 설계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① 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

□ 서민과 소상공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차임 부담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 '21. 11. 국회 심사 중,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채권 양수·변제요구 금지, 채권 소멸시효 통지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법」 개정 예정
※ '20. 1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신속 입법 추진

□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 신설('22. 상반기)
- 성실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보장, 근로계약 기간 단축(1개월→1주일) 등 농어촌 실정에 맞게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21. 12.)

② 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맞춤형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제도 개선

- 스타트업 법률전문가가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22년)
-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을 신설하고, 법률지원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신기술 사업 분야 지원('22년)
-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특성에 맞게 운영과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유한회사 제도 개선* 검토('22년)
*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표준정관 마련, 자금조달 방안 개선

③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 확충('22. 상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22. 1.) 등으로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 범죄피해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이용자의 성향 분석, 사례 관리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22년)

□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단순 실무교육 위주의 직업훈련과정을 자격증 취득과정 또는 다기능 과정으로 전환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직종 신설('22. 1.)
- 수형자의 재취업 강화를 위해 주변 교정기관과 공동으로 작업을 유치하는 거점형 교도작업 체계 구축('22년)
-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위해 지자체·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수용자 자녀에게 학자금·생계비·상담 제공
 - ※ '21. 10. 기준 학자금 397명·생계비 370명·상담 630명 등 지원, 서울교정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3개 지방교정청에 추가 설치('22. 4.)

④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 민생사건에 검찰 역량 집중

-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수사체제」를 통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사금융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 전국 28개 검찰청에 서민다중피해 범죄 전담 검사 69명 지정('21. 11. 기준)
- 검찰의 역량을 민생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공판부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격려하고, 성과를 업무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

□ 약식절차에 집행유예 제도 도입

-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약식절차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회복 지원
 - ※ 「형사소송법」('20. 12. 백혜련의원 개정안 발의) 개정 관련 국회 논의 적극 지원

3.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

①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를 위한 입법

-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22. 상반기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협약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제도 정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처우 방안 마련

- 민간이 운영하던 입국불허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22. 8. 18.)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22. 상반기)
-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호외국인 보호 연장의 적정성 판단 및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의 전환 등 인권보호('22. 하반기)

②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

□ 미래지향적 선진 국적제도로의 개선

- 대한민국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 및 사회기여자에 대한 귀화대상 확대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 완화('22. 상반기)
- 유학생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거주→영주→국적), 특별 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으로 복수국적 확대('22. 상반기)

□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도모

- 개방적·포용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 산하에 T/F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발굴('22. 1.)

③ **공정한 형사사범을 통한 법치 확립**

□ **대선·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정 수사**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공정한 처리로 선거사범 수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각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 설치('21. 12. 9.),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돌입

□ **안전사고 등 국민안전 위해사범 엄정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맞추어 중대 안전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수사체계 확립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정립('22. 1.)
- 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상시적·즉각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체계 구축('22. 1.)

④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행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하며 배상액 한도를 상향(5배)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22. 1분기)

□ **법인 운영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국회 논의 적극 대응
*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근거, 공익법인의 인정·취소, 전문인력 육성·교육 지원, 기부금품 모집 등 개정안 국회 제출('21. 7.)
-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자산 10→5억)* 등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개편 추진('21~'23년)
*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 10.)

4. 모두가 편안한 안전사회

①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선

□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법제 정비

-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제출('22. 상반기)
 - ※ 아동학대 대응실태 및 사건관리회의 개최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굴('22년)
- 법무부 발간 성폭력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22.1분기)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 검토('22.3분기)
 - ※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및 제·개정된 수사매뉴얼에 따라 엄정 처리

② 실효적인 범죄 안전망 구축

□ 소년범죄 조기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비행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과 상담전문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 운영('22. 6.)
- 소년범죄 저연령화·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14세 → 12세, 13세)
 - ※ 「형법」 개정안 4건, 「소년법」 개정안 3건 국회 심사중

□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인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지자체장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관리시스템 구축
 - ※ '21. 7. 「보호관찰법」 개정('22. 1. 시행)
- 스토킹·아동학대사건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가해자·피해자 정보를 법원·검찰·경찰 등과 공유 추진('21. 12.부터 협의 예정)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 디지털성범죄자의 범죄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무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22. 10.)
- 알코올 등 중독사범의 재활 및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시범 운영(22. 6.)

* 타인의 행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배우는 구조화된 중독재활 프로그램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의원 발의('21. 10.)
- 형기가 종료된 범법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논의 지속 지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21. 2.)

④ 엄정하고 효율적인 체류질서 확립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탄력적 국경 관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진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자여행 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50 → 112개국)
* '21. 9.부터 시행하여 국경안전 확보, 승객맞춤형 입국심사, 수수료 징수로 세수 확충
- 국제이동 재개에 따라 예방접종률 등 위험도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별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 점진적 재개 예정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 추진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난민신청자 조기취업 허가 등 진정한 난민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중대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허위 난민신청 알선·권유자 처벌 강화, 심사 중 출국시 난민신청 취하간주 등 난민제도 남용 방지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15→50명) 등 합리적·전문적 난민인정심사체계 구축
※ 「난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21. 12.),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I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p>법무·검찰 혁신</p>	<p>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정립 ·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검·경간 협력관계 지원 <hr/> <p>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가 확립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배당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증인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 차단 위한 기준 마련 <hr/> <p>연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이 조성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AI 법률상담 추진(연간 140만 건 법률상담 빅데이터 기반) · 교정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밴드 등 활력징후 감지시스템 구축 <hr/> <p>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가 정비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콘텐츠 요소 명문화 등 미래 시민사회 대비 민사법 개정 ·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p>민생에 힘</p>	<p>위기의 서민경제 극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 신설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hr/> <p>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 <hr/> <p>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이 추진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진솔조력 전담 인력 확충,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자녀지원 등으로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 지원 <hr/> <p>민생 중심으로 검찰권이 행사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가상자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검찰 역량 집중 · 약식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도입으로 서민의 경제적 회복 지원
<p>공정사회</p>	<p>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가 구현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호 연장 적정성 판단 등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hr/> <p>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적·이민 정책이 추진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은 유공자 및 사회기여자에 대한 귀화대상 확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 완화 ·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 <hr/> <p>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형사사법이 시행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법 공정수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 수사체계 확립 및 양형기준 재정립 <hr/> <p>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 적용 추진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자산 10→5억)
<p>안전사회</p>	<p>실효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정비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 · 지역사회 등과의 정보 공유로 유기적인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hr/> <p>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로 재범을 철저히 막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사범에 대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전문화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 주거지 출입근거 마련 <hr/> <p>엄정하고 효율적인 체류질서가 확립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 점진적 확대(50→112개국)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15→50명)으로 합리적·전문적 난민인정심사체계 구축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

- 호프집 사장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 납부를 걱정하고 있었고, 노래방 업주 B씨는 거둬진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위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0. 9.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덕을 톡톡히 보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법무부가 ① 차임감액 사유에 코로나19 등의 1급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추가하고, ② '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 * '19. 4.~'21. 1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차임 등 증감 신청 건수 228건

□ '인권보호관'으로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검찰

- A씨는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조부의 땅 문제로 친척과 오랜 갈등을 빚다가 고소를 당하였다. 억울했던 A씨는 경찰 수사 중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 하지만 A씨는 올해 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확대한 덕분에 며칠 후 검사의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아들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구속의 두려움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다.
- * 검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로 종래 주로 사후 구속 영장 청구 시 실시하던 것을 '21. 1.부터 사전 영장의 경우에도 활용하도록 확대

□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지킴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 A씨는 10세 자녀(B군)를 폭행하여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ㄱ검사는 조사과정에서 A씨와 동거하던 B군의 정서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B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역 정신과전문의·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결과, ㄱ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생계비 등의 긴급지원을 의뢰하였고, 가해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였다. 또한 A씨와 B군의 분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지자체장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친권의 제한정지 등을 결정해 주도록 법원에 청구
- ㄱ검사의 신속한 판단과 사건관리회의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B군은 조금씩 아픔을 극복하며 또래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운 사회봉사명령·외국인 계절근로제도

- A씨는 밭양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이다. 올해도 수확철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일손이 부족하여 밭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보령에서 멀치를 건조하는 어민 B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 법무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기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어촌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A씨와 B씨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무사히 일을 마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 수형자와 기업인이 함께 웃는 취업매칭 직업훈련

- 수형자 A씨는 교정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용접자격증을 취득한 후, 맞춤형 기술숙련 훈련과 함께 우수 기업체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업 매칭반에 지원하였다.
- 마침 용접기술자를 구하고 있던 충북 진천 소재 △△기업의 B 대표는 교도소의 추천을 받아 직업훈련장에 방문하여 A씨의 우수한 용접기술을 확인하고, △△기업에서 활용하는 용접기술을 추가로 지도한 후, A씨가 출소하자마자 그를 채용하였다.
- A씨는 기술자격증을 갖춘 안정적인 직업인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B 대표는 회사에 필요한 숙련기술인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한부모 결혼이민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준 체류자격제도

-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다. 어느덧 성년이 다 된 자녀들을 볼 때면 무사히 키웠다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 양육 시 부여되는 결혼 이민자(F-6-2) 체류자격이 더 이상 A씨에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 하지만 '21. 1. 체류자격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거주자격(F-2)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자녀들과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법률지원사업 대폭 확대

- A씨는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창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꼈다. 이때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창업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부터 창업에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와 자문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 창업가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 창업절차에 대한 기본 가이드 및 창업 전반 정보,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지식 등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 법률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 유통식품 대표 B씨는 외국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큰 손실을 입어 해외진출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꼼꼼한 자문을 받고 새로운 식품제조 기업과 안전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양한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 A씨는 최근 제주여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었고, 며칠 전 제주경찰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받게 되었다. 하지만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간단한 조사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 그러나 '24년까지 원격화상조사*를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면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A씨는 속히 화상조사가 활성화되어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장소 구애 없이 모바일·PC 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연간 참고인 수 약 30만 명, 이동에 연간 105만 시간 소요)

□ 법원 출석 없이 재판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시스템' 구축

-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등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위해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했지만, '21. 11. 부터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A씨와 같은 경우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이용한 재판참여가 가능해졌다.

- 앞으로 A씨와 같이 구속영장 심문절차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증인이나 사건관계인들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스토킹에 대한 인식 대전환, 「스토킹처벌법」 시행

- A씨는 와인동호회 뒤풀이에서 알게 된 B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최근에는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자 두려움에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 수사관은 최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 되면 범죄가 되고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므로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B씨에게 경고하였다. 이후 B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A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 발달장애인 A씨는 거주 중인 보호시설 종사자로부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학대 피해를 당해왔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피해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 하지만 '22. 2.부터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게도 진술조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아 피해장애인 쉽터로 인도되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삭기 운전자 A씨는 평소 2인 1조 작업수칙 등 현장 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협에 대한 불안함 속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다행히 A씨가 소속한 ○○건설(주)은 '2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작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드론 등 '원격현장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세부적인 작업수칙을 매뉴얼화함으로써 회사가 관리하는 건설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였다.
- 덕분에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작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